

제 6 장

통일정책과 국민적 합의

제1절 국민참여와 여론수렴

제2절 통일정책 홍보

제3절 국제협력과 해외홍보

제4절 통일·북한 정보자료 서비스

제5절 통일교육

제6장

통일정책과 국민적 합의

정부는 통일정책 전 분야에 걸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국민과 소통하며 통일정책에 대한 국민적 합의기반을 강화하였다.

사회 각계각층의 인사로 구성된 남북관계 분야별 자문회의 운영, 정책고객과의 대화, 상생공영포럼 등을 통해 국민들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있다. 또한 통일교육의 내실화와 다양화, 인터넷을 통한 정책홍보, 남북관계·북한 관련 자료제공 및 정보공개제도 활성화, 각종 홍보자료 발간, 언론 브리핑 등을 통해 통일 및 대북정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 힘쓰고 있다.

또한 정부는 국제사회와 조화된 통일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제통일전략대화, 해외인사 초청 간담회, 영문 홈페이지 운영 등을 통해 국제사회와의 소통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제1절 국민참여와 여론수렴

정부는 통일문제 및 대북정책에 대한 여론을 정책과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주기적으로 일반국민 대상 여론조사를 실시하였다. 외부 전문조사기관에 의뢰하여 상생공영정책, 대북지원 등 주요 현안에 대한 국민의사를 파악하는 동시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민주평통), 언론기관 등에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도 활용하여 그 결과를 정책수립 및 집행에 반영하였다.

정부는 출범 초기 과거 대북정책에 대한 수정·보완이 필요하다는 국민적 요구와 새 정부 국정철학을 반영하여 「상생과 공영의 남북관계 발전」을 새로운 정책비전으로 제시하였다. 4월에 실시한 통일부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러한 정책방향에 대해 56%의 국민이 지지 의사를 표명하였다. 북핵문제 해결과 남북관계 진전에 대해서는 75%가 병행추진 되어야 한다고 응답했다. 4월부터 본격화된 북한의 대남비난에 대해서 정부가 맞대응하지 않고 의연하게 대처한데 대해, 많은 국민들이 이러한 정부의 입장을 지지(63%)하였다. 또한 정부는 상생의 남북경제협력을 통한 경제공동체 형성을 비전으로 삼고 민간교류협력이 꾸준히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고 있는바, 우리 국민들도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할 분야는 ‘남북경협 등을 통한 북한의 개혁·개방 유도’라는 의견(34%)을 제시하였다. 정부는 출범초부터 일관되게 남북대화를 제의하면서 대화와 협력을 통한 남북관계 정상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 국민들 또한 소강상태에 있는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남북회담이 재개되어야 한다는데 공감(64.6%)하였다.

식량·비료 등 대북 지원에 대한 5월 조사에서는 ‘북한의 요청’이나 ‘북핵문제 진전’ 등 상호주의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74.9%인 반면, ‘조건없이 지원’ 하자는 의견은 14.1%에 그쳤는데, 이는 북한의 대남비난, 대화중단 조치 등이 우리 국민의 대북인식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처럼 통일부는 여론을 신중하게 반영하여 국민적 합의에 기반한 통일 및 대북정책을 추진하고자 노력하였다.



제1회 상생공영포럼(2008.11.13)

한편, 통일정책에 대한 의견수렴과 소통을 위하여 「정책고객과의 대화」를 추진하였다. 「정책고객과의 대화」는 2004년부터 시행된 쌍방향 소통채널로, 상반기에는 통일부 차관이 민간통일운동단체 대표를 대상으로, 하반기에는 각 실국장이 소관 민간단체 대표를 대상으로 대북정책 현안에 대해 설명하고 의견을 청취하였다. 또한 통일부 장·차관 주재하에 개성공단 입주기업대표, 남북교류 관련 민간단체 및 남북경제협력사업 관계자 등의 정책고객과의 직접대화도 실시하였다.

「정책고객과의 대화」 성과를 바탕으로 여론 주도층과의 소통을 정례화하여 발전시킨 것이 「상생공영포럼」이다. 「상생공영포럼」은 통일부 장관·차관이 월 1회 문화계, 경제계 등 분야별 대표와 함께 통일정책 및 주요현안에 대해 소통하는 장이다. 2008년 11월 통일부 장관 주재로 개최한 제1회 상생공영포럼에서는 110여개의 민간단체에서 120여명의 단체 대표가 참석하였다. 보수와 진보, 다양한 연령층이 함께 통일문제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정책을 제언하는 등 통일부와 민간단체, 그리고 민간단체들 상호간에 소통하는 기회가 되었다.

한편, 1990년대 이후 민간통일운동단체들의 수가 크게 증가한 가운데 2008년에는 10여개의 신규단체가 추가되어 2008년 12월말 현재 통일부에 등록된 비영리법인은 총 219개이다. 이들 단체의 활동영역도 통일정책 및 남북관계 연구·조사, 이산가족·북한이탈주민지원, 대북 교류협력사업추진, 통일교육 등으로 세분화·전문화되어 가고 있다.



민주평통 운영·상임위원회 합동회의시 통일부장관 강연(2008.12.5)

이에 통일부는 유관기관 및 민간통일운동단체 등과 대면 접촉점을 확대하고 다양한 협력사업을 통해 대북정책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고자 하였다. 통일부 장관·차관은 민주평통 직능별 위원,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이하 민화협), 민족통일협의회(이하 민통), 통일교육위원협의회 등 통일문제 관련 주요단체 관계자들을 만나 통일정책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민화협 10주년 기념행사(2008.9.3), 민통 전국대회(2008.9.26), 민화협·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 공동주최 국제학술회의(2008.10.22~23) 등에 참석, 통일정책을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하였다. 이외에도 통일부는 민간통일운동단체가 주최하는 정책토론회, 통일포럼 등에 대한 지원을 통해 대북정책에 관한 국민들의 공감대 형성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통일부가 운영하는 각종 법정위원회에 민간인 출신 위원을 참석하게 한 것도 통일정책 수립에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한 노력이었다. 「남북관계발전위원회」에는 총 20명중 9명의 민간위원이,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에는 총 18명중 5명의 민간위원이 위촉되어 통일정책 추진과정에 직접 참여하였다.

또한 자문기구를 통해 원로·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 정책추진과정에 반영하였다. 학식과 덕망을 갖춘 사회 각계 원로급 인사로 구성된 「통일고문회의」를 통하여 통일에 관한 여론을 종합하고 국민의 통일의식을 고취시키고자 하였다. 통일정책, 남북회담 등 5개 분야별 「정책자문회의」를 매 분기별로 개최하였으며, 연 1회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자문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통일문제에 관해 온라인상 소통을 활발히 하고자 통일부 홈페이지(www.unikorea.go.kr)에 국민의 의사를 수렴할 수 있는 별도의 공간을

마련하였다. '국민광장' 자유게시판을 통해 국민들은 다양한 의견을 피력하고 있고, '질문과 답변' 란에서는 남북관계와 통일정책 관련 국민들의 질문에 대해 각 업무 담당자가 답변을 제공하고 있다.

통일문제와 대북정책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통일고객 마일리지 제도」를 원용하고 있다. 「통일고객 마일리지제도」는 통일부 홈페이지에 회원으로 가입한 고객이 홈페이지상 '전자공청회', '정책제안' 등 온라인 활동 및 '통일교육', '정책고객과의 대화' 등 오프라인 활동에 참여한 실적에 따라 남북교류협력 현장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는 제도이다. 2008년 현재 4만여 명의 마일리지 회원들이 활동하고 있으며 이들에게는 뉴스레터 발송 등 각종 정책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2008년 한해동안 마일리지 우수회원 20여 명에게는 판문점 등 남북관계 주요 현장을 방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도 하였다.

한편, 소장 및 중견학자 등 남북관계 전문가 100명으로 「사이버 정책 모니터링단」을 구성하여 매월 1회 온라인 정책모니터링을 실시하였다. 사이버 정책모니터링단은 남북관계 주요 현안에 관련된 의견을 신속하게 수렴할 수 있는 틀이 되어 적시성있는 정책 추진에 기여하였다.

또한 통일부는 파워포인트, 동영상, 퀴즈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하여 국민들이 대북정책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파워포인트 자료는 통일부 전직원이 참여한 경진대회를 통하여 직원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반영하여 작성되어 대북정책 홍보에 활용되었다.

제2절 통일정책 홍보

정부는 상생공영정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국민적 합의를 강화하기 위해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정책홍보를 추진하였다.

먼저 통일부는 2008년 연두업무보고(2008.3.26)를 통해 '실용과 생산성'에 기초한 '상생공영의 남북관계 발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통일부 연두업무보고(2008.3.26)

화해협력을 바탕으로 한반도 평화정착과 남북관계 발전을 지속적으로 추구하되, 추진방식을 실용적·생산적으로 전환함으로써 평화통일의 실질적 기반을 구축하겠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후 이러한 관점에서 상생공영정책에 대한 지지 기반 확대를 위해 정책 홍보를 강화하였다.

언론·방송 관계자 및 여론 주도층을 대상으로 정책에 대한 설명을 강화하였다. 대변인이 매일 기자 브리핑을 실시하고 장·차관이 TV방송 등에 출연하여 상생공영정책에 대해 설명하였다. 또한 남북관계 전

문가, 학자, 이산가족 등 관련 이해당사자와의 정책대화를 지속적으로 실시, 지지를 얻고자 하였다.

이와 함께 상생공영정책을 체계화하고, 일반국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려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경주하였다. 먼저 상생과 공영의 대북 정책 설명자료인 『이명박정부 대북정책은 이렇습니다』를 발간(2008.8.1)하여 상생공영정책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하였다. 이 자료는 국문뿐 아니라 영문·중문·일문으로도 발간하여 국제적인 홍보에 활용되기도 하였다. 또한 일반 국민 대상으로는 홍보리플렛 2종을 제작·배포(2008.7.31)하였다. 젊은층의 관심 제고를 위해 통일퀴즈책자(2008.12.26)와 상생공영정책 만화(2008.11.26)를 제작·배포하였고, 홍보동영상 제작(2008.12.26), 지하철 기획광고방송(2008.10.20~12.20), KTX 영상광고(2008.9.8~10.7) 등 새로운 매체를 활용한 홍보에도 힘을 쏟았다.



일일통일교사 장면

또한 「순회홍보전담팀」과 「일일통일교사」를 실시하여 국민 속으로 찾아가는 맞춤형 홍보를 실시하였다. 순회홍보팀은 16개 시·도를 6개

권역으로 나누어 언론인·전문가·공무원·교직원·유관단체 인사 8,000여명을 대상으로 총 149회의 정책대화를 실시하였다. 또한 통일부 직원들이 직접 「일일통일교사」가 되어 인근학교학생과 단체회원 1만 6,299명을 대상으로 총 250회에 걸쳐 통일교육을 실시하기도 하였다.

온라인을 통한 홍보도 적극 추진하였다. 통일부 홈페이지의 검색기능을 강화하여 정보 접근을 높이고, 영문 홈페이지의 디자인을 새롭게 개편하였다. UCC 공모전(2008.6.15~7.22), 상생공영 4행시 공모전(2008.9.19~12.31), 연말특집 통일부 웹진 제작 등을 통해 변화된 미디어 환경에 적극 대응하고자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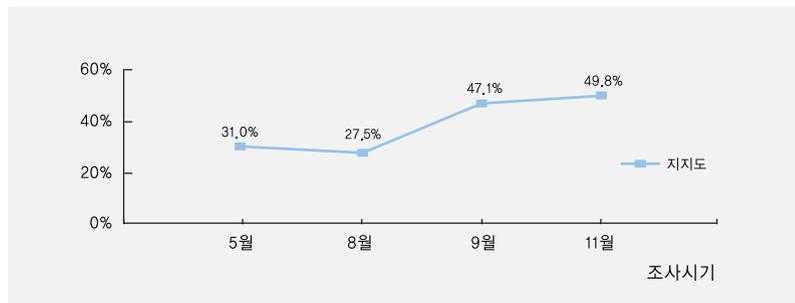
젊은층과 공감대를 확대하고자 하는 노력도 진행되었다. 8월 말에는 통일부 대표 블로그인 ‘통일미래의 꿈’ (blog.daum.net/mounification)을 개설하였으며 10월 말에는 14명의 대학생들을 「제1기 상생기자단」으로 선발하였다. 통일부 블로그에는 정책자료를 쉽게 재가공해 네티즌에게 제공하는 동시에 인터뷰·현장취재·UCC제작·생활밀착소재 기사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연성적·감성적 홍보를 시행하였다.

통일부는 이렇게 상생공영정책을 홍보함과 동시에 남북관계 관련 현안들을 안정적으로 관리하여 대북정책으로 인한 남남갈등의 소지를 해소하려고 노력하였다.

6.15공동선언과 10.4선언,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건, 북한의 군사분계선 통행제한 조치(이하 「12.1조치」) 등에 대한 대내외 설명자료를 발간·배포하였다. 또한 계기별로 『이명박 정부 출범 6개월 추진현황』 자료와 『2008년 대북정책 어떻게 추진되었나?』 등의 정책 설명자료를 배포하여 남북관계 현안에 대한 정부 입장을 정립하고 대내외적인 공감을 얻고자 하였다.

상생공영정책 지지도 추이

31%(5월, 조선일보-갤럽) ↗ 27.5%(8월, 조선일보-갤럽) ↘ 47.1%(9월, 민주평통-갤럽) ↗ 49.8%(11월, 민주평통-에이스리서치)



이러한 정부의 노력에 힘입어 상생과 공영의 대북정책에 대한 국민 지지도는 2008년 한해 동안 지속적인 상승추세를 보였다.

제3절 국제협력과 해외홍보

2008년에는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EU 지역에서 총 10회의 「국제통일전략대화」를 개최하였다. 「국제통일전략대화」는 각국 정부 관료와 한반도 문제 전문가가 참여하는 세미나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상생

공영정책, 북핵문제 해결, 대북정책과 국제공조, 남북관계 현안 등 시의성 있는 주제로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중국 북경대 조선문화연구소 및 길림성 사회과학원, 러시아 사회경제연구센터, 일본 시즈오카 현립 대외 카잔카이 연구소, 베를린 자유대 등 해외 유력 연구기관과 공동 주최하였다. 정부는 「국제통일전략대화」 추진시 미국의 국무부·상무부·의회, 중국의 외교부, 일본의 외무성·내각관방 등 유관 정부 기관을 방문하여 한반도 정세와 대북정책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고 현지 우리 교민을 대상으로 한 대북정책 설명회도 병행하였다.

통일부를 방문한 외빈을 대상으로 대북정책에 대한 국제사회의 협력과 이해를 제고하는 노력도 지속하였다. 2008년 통일부를 방문한 주요 외빈들로는 크리스토퍼 힐(Christopher Hill) 미국 국무부 동아태차관보, 척 헤이글(Chuck Hagel) 미국 상원의원, 조지 스왑(George Schwab) 전미외교정책협의회(NCAFP) 회장, 에반스 리비어(Evans Revere) 코리아소사이터티 회장, 장춘시엔(張春賢) 중국 후난성 당서기, 가레스 에반스(Gareth Evans) 국제위기기구(ICG) 회장, 스티븐 스미스(Stephen Smith) 호주 외교장관, EU 의회 대표단, 영국 하원 외교위원회, 디터 알트하우스(Dieter Althaus) 독일 튀링엔주 총리 일행, 패시 솔로몬(Passy Solomon) 불가리아 국회 외교분과위원회 위원장 등이 있다.

한편 한국을 방문한 해외의 남북관계 전문가를 통일부로 초청, 이들의 전문분야에 대한 브리핑을 듣고 토론하는 「인터내셔널 포럼」을 운영하였다. 2008년에는 미국 맨스필드 재단 소장, 미국 피터슨국제관계연구소 연구원, 도쿄대 국제관계학부 교수, 전미아시아문제연구소(NBR) 연구원 등을 초청하여 「미국 차기 정부의 대북정책 방향」, 「북

한의 경제 및 식량사정', '북일관계 전망', '중국의 대북정책' 등을 주제로 토론을 진행하였다.

주한외교관 대상으로 정책설명회를 총 3회 개최하여 대통령 연두업무보고, 금강산 관광객 피격사건, 북한의 통행제한 조치 등의 주제에 대하여 정부 입장을 설명하였다. 또한 남한과 북한 양국에서 대사를 겸하고 있는 남북 겸임대사들을 대상으로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하였다. 5월 13일에는 통일부 장관이 11월 28일에는 통일부 차관이 주재한 본 행사에서는 캐나다·이탈리아·핀란드·뉴질랜드 대사 등 겸임대사들과 함께 한반도 정세와 관련한 의견을 나누고 정책적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또한 미국, 중국, 일본 현지에서 활동하는 통일안보관을 통해 「한반도 전문가 연구모임」을 결성, 주기적으로 모임을 개최하고 있다. 이 모임을 통해 현지 한반도 문제 전문가와 남북관계 및 한반도 정세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있으며 2008년에는 미국 1회, 일본 3회, 중국 5회 등 총 9회의 모임을 개최하였다. 본 모임은 미국의 경우 KEI, CRS, CSIS 등 유수의 연구기관 소속 한반도 전문가들로, 일본의 경우 도쿄대, 시즈오카 현립대, 릿쿄대 등의 대학 중심으로, 중국은 북경대, 중앙당교, 개혁개방논단 등 민간전문가와 정부관계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편 통일부는 정부의 대북정책과 남북관계 주요 현안에 대하여 미국, 중국, 일본, 유럽 등 주변국들과의 고위 및 실무급 정책협의를 계속하여 왔다. 통일부 장관은 12월 21일에서 24일까지 3박4일 일정으로 중국을 방문, 한·중 고위정책협의를 진행하였다. 본 협의에서는 다이빙궈(戴秉國) 국무위원, 양제츠(楊潔篪) 외교부장, 왕자루이(王家瑞) 중국공산당 대외연락부장, 우다웨이(武大偉) 외교부 부부장 등을 면담하고 남북관계, 한반도 정세 및 한중간 협력 문제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한·중 고위정책협의(2008.12.21~24, 중국)

미국, 중국, 일본, 유럽지역의 경우 실무급 정책협의를 개최하여 정부의 대북정책과 남북관계 추진과 관련한 주변국들의 관심사항을 위주로 논의하였다. 또한 남북관계 현안 발생시 미국, 중국, 일본 등 주요국 대사를 면담,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하는 동시에 이들 국가의 의견을 청취, 남북관계 추진에 반영하였다.

이 외에 「통일문제 관련 의원 워크숍」을 개최하는 등 국회차원의 국제협력을 지원하였다.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속 신낙균 의원과 문국현 의원은 12월 16일부터 22일까지 독일, 폴란드, 체코를 방문, 의원 대표 및 외교 분야 인사들을 대상으로 한국의 통일정책 추진 의지를 피력, 관련국의 이해와 협조를 요청하였다. 또한 12월 22일에는 미국 콜롬비아 대학교와 공동으로 한반도문제 관련 전문가 세미나를 개최하여 '미국 차기 정부의 대북정책과 한미 공조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대북정책에 대한 재외동포사회의 이해를 돕고 교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제18차 「세계한민족통일문제대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 토론회는 10월 28일 일본 도쿄에서 열렸으며, 통일부 차관은 이 자리에서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을 설명하고 동포사회의 견해를 청취하였다. 이뿐만 아니라 중국 및 러시아, 독립국가연합(CIS) 지역의 재외동포사회에 대해서는 8개 동포사회 신문과 방송에 「통일칼럼」을 매월 게재하고 있으며, 러시아 사할린 우리말 방송국의 「통일소원 음악회」 등 4개 동포기관과 단체가 주관하는 통일문화행사를 지원하였다.

또한 영문판, 일문판, 중문판으로 발간된 대북정책 설명자료를 재외공관을 통해 해외에 배포하는 한편, 한국외교협회에서 발간하는 「외교」지 영문판과 계간지 「Korea & World Affairs」에 대북정책 관련 원고를 게재하는 등 상생공영정책 추진 방향에 대한 국제사회의 이해를 돕고 정부의 남북관계 발전 의지를 알리는 노력을 지속하였다.

제4절 통일·북한 정보자료 서비스

정부는 북한에 대한 객관적이고 정확한 이해를 위해 북한의 실상과 변화 동향을 면밀히 파악하고 향후 변화의 흐름을 예측하는데 주력함과 동시에 이를 다양한 형태로 국민들과 전문가들에게 제공하였다.

남북관계의 발전과 민간영역의 확장에 따라 민간분야의 북한정보수요는 급증하고 있다. 이를 충족시키기 위해 2008년에는 449건의 자료를 생산하여 국민들에게 제공하였으며, 721건의 자료를 통일부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였다.

먼저 ‘북한방송 주요내용’을 매일 통일부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한편 ‘월간 북한동향’을 정기 발간하여 전 분야에 걸친 다양한 정보와 분석 자료를 국민들에게 제공하였다. 특히 기존의 책자배포 방식을 보완, 전자메일 발송방식을 도입하여 정보 접근성을 제고하였다. 또한 홈페이지 등을 통해 북한의 ‘분야별 변화동향’을 제공하였으며, 북한의 당·정·군 등 기관단체들의 조직구조 및 인물 현황을 종합 정리한 『북한 기관·단체별 인명집』과 주요인물들의 활동사항을 정리한 『북한의 주요인물』 자료집을 발간하여 관계기관 및 유관단체 등에 제공하였다.

통일 및 북한문제 관련 전문기관, 연구자들에게 정보자료를 지원하고 교류하는 등 쌍방향적 협력체제를 강화하였다. 통일연구원 등 북한 연구 전문기관과 정기적으로 협의회를 개최하여 자료를 지원하고 전문가들의 견해를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하였다.

정부는 일반인에게 북한이해에 도움을 주는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1989년 5월 22일 「북한자료센터」를 설립한 바 있다. 「북한자료센터」는 북한관련 도서자료 6만 5,000여 권, 정기간행물 9,000여 권, 세미나자료 3,200여 건, 시청각자료 8,000여 건, 통일부 발간물 6,500여 건 등 총 9만 2,000여 건의 자료를 보유하고 있다.

북한자료센터 북한 원전자료 보유현황

(단위 : 건)

종 류	자 료 건 수
단 행 본	15,458
정기간행물	3,331
시청각 자료	4,516
기 타	6,587
계	29,892

「북한자료센터」는 통일 및 북한문제 전문가, 대학생, 관련 단체 회원 및 탈북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북한실상 설명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여 북한실상 및 북한주민 생활상 등에 대해 자유롭게 토론하는 기회를 제공해오고 있다. 1989년 「북한실상 설명회」가 시작된 이후 2008년 12월말까지 총 469회를 개최하였으며 4만 400여 명이 참가하였다. 2008년에는 총 28회의 설명회를 개최하여 총 3,500여 명이 참가하였다.

「북한자료센터」는 소장하고 있는 2,300여 편의 북한영화를 1990년 3월부터 매월 1회(마지막 주 금요일 오후 2시) 정기상영하고 있으며 2006년부터는 오두산 통일전망대와 인천·창원·제주·부산·광주·청주 통일관 등 6개 지방도시로 상영지역을 확대하였다. 1990년 북한자료센터에서 북한영화 상영을 시작한 이래 지금까지 6,400여 회에 걸쳐 총 114만 4,000여 명이 관람하였으며 2008년 한 해 동안 총 900회 상영을 통해 13만 5,000여명이 관람하였다. 또한 2008년에는 기록영화와 예술영화 등 비이념적인 북한영상자료 40여 건을 재분류하여 일반에게 공개하기도 하였다.

이뿐만 아니라 「북한자료센터」는 「통일교육원」과 더불어 북한 TV방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원하는 프로그램을 선택하여 볼 수 있도록 「북한자료센터」 홈페이지에 북한 조선중앙텔레비전의 프로그램 편성표도 제공하고 있다.

대외적으로는 국내 유관 연구기관 및 단체와의 정보자료교류협약을 체결하여 자료교환협력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2004년에는 국회도서관, 외교안보연구원, 통일연구원,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와 협약을 체결하였고, 2005년에는 연세대 통일연구원 및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와, 2006년에는 이화여대 통일학연구원, 동국대 북한학

연구소, 그리고 2007년에는 서울대 통일연구소, 경기개발연구원 통일문제연구소, 평화문제연구소 등 3개 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였다. 또한 2008년에는 북한연구소, 명지대 국제한국학연구소, 대전대 북방연구소 등 3개 기관과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2008년 12월 현재 총 14개 기관과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북한영상자료 우편대출 서비스를 통하여 그동안 서울·수도권에 편중되어 있는 북한정보자료의 접근기회를 전국적으로 확대하였다. 각급 학교 및 지역 공공도서관에도 북한 영상자료의 우편대출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2008년 5월부터 7월까지 개최된 제4회 「세계책나라축제」에 참가하여 북한 자료들을 소개하였고, 2008년 10월에는 제1회 「성동도서관문화페스티벌」에 참가하여 ‘북한 어린이에게 사랑의 메시지 보내기’, ‘백두산 배경으로 사진 찍기’ 등 다양한 통일문화행사를 개최하였다.

한편 「북한자료센터」 소장자료에 대해 무선주파수인식기술(RFID) 시스템을 구축하고 자료를 효율적·체계적으로 관리하며 도서반납과 대출관련 ‘문자메세지 서비스(SMS)’를 실시하여 자료이용의 편의를 도모하였다. 특히 2008년 4월에는 소장자료 검색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새로운 검색 엔진을 도입하였으며, 12월에는 ‘북한어’와의 차이를 고려, 유사어를 통한 검색이 가능하도록 ‘연관어검색 체계(시소러스)’를 도입하였다.

제5절 통일교육

1. 통일교육 기본방향

통일교육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민족공동체 의식 및 건전한 안보관을 바탕으로 통일을 이룩하는 데 필요한 가치관과 태도 함양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정부는 1999년 2월 5일 「통일교육 지원법」을 제정하여 통일교육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통일교육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범국가적이고 체계적인 통일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구축하였다.

2008년 12월 31일에는 「통일교육 지원법」을 일부 개정하여 통일교육심의위원회와 통일교육실무위원회를 폐지하는 한편, 동 위원회가 심의·의결을 하던 사항을 관계기관과의 협의로 대체하도록 하였다. 이는 부처 중심의 책임행정체제를 확립하고 의사결정의 신속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전 정부적인 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추진된 것이다.

통일부는 「통일교육 지원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매년 통일교육의 추진방향 및 중점 추진과제를 정하여 중앙행정기관, 시·도 교육청 등에 제시하고 기관별 추진계획을 취합·조정해서 「통일교육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또한, 학교 및 사회 통일교육이 일관되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통일교육의 내용 체계와 지도방향을 담은 『통일교육지침서』를 매년 발간하여 전국 초·중·고등학교 등 일선 통일교육 현장에 보급하고 있다.

2008년도에는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의 기초를 반영하고 안보 현실에 대한 인식과 북한에 대한 객관적 이해의 필요성을 강조한 「미래지향적 통일관」, 「건전한 안보관」, 「균형있는 북한관」을 확립하는 것을 통일교육의 기본방향으로 설정하였다. 이는 종전의 10년간의 통일교육이 남북관계의 진전과 남북 교류협력의 측면을 강조함으로써 북한의 실상과 안보 측면을 상대적으로 소홀히 했다는 비판이 제기된 것을 반영한 것이다.

「미래지향적 통일관」이란 우리가 추구하는 통일은 단순한 분단극복의 차원을 넘어 민족공동체의 발전과 도약에 기여하는 통일이며, 이는 통일한국이 자유민주주의의 진전과 민족경제의 발전, 그리고 세계평화와 번영에도 창조적으로 기여하는 공동체를 지향한다는 의미이다.

「건전한 안보관」은 냉엄한 국제질서와 한반도의 군사적 대치 상황에서 국가를 유지·보존하고, 한반도 평화 정착 및 실질적인 남북관계 발전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튼튼한 안보의식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그리고 「균형있는 북한관」이란 통일의 상대방인 북한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이해를 위해서는 정확한 사실과 자료를 바탕으로 북한 사회 전반을 객관적·균형적으로 알리고 북한이 화해협력의 대상이자 현실적인 안보 위협의 상대라는 점을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2008년도에는 이러한 통일교육 기본방향에 따라 「통일교육기본계획」과 『통일교육지침서』를 작성하였으며, 일선 통일교육 현장에서 체계적인 통일교육에 활용할 수 있도록 『통일교육지침서』를 3만 2,000여 부 발간·배포하였다.

2. 초청교육

우리정부는 사회지도층에 해당하는 각종 사회단체 임원·회원, 교사 등 교육관계자, 중앙과 지방의 공무원 등을 서울시 강북구 소재 통일교육원으로 직접 초청하여 통일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2008년도에는 총 5,217명을 초청하여 교육을 실시하였다.

2008년에는 통일환경·북한실상 등에 대한 객관적이고 사실적인 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남북한 군사회담과 국가안보」, 「북한인권 문제와 해결과제」, 「북핵문제 해결과 북미관계 전망」 등 안보, 북핵문제, 북한인권 등 통일환경과 북한이해 분야 전문커리큘럼을 신설하였다.

이러한 초청교육은 사회통일교육 과정, 학교통일교육 과정, 공무원 통일교육 과정, 통일미래지도자과정, 방북안내교육 등으로 구별되어 실시되었다.

가. 사회통일교육 과정

사회통일교육 과정은 통일교육의 중간전달자라고 할 수 있는 각 지 역사회 및 직능단체의 여론 주도층을 대상으로 한 교육으로, 2008년도에는 총 29개 학급 1,846명을 대상으로 1~3일간의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여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전문성 제고에 주안점을 두었다.

사회통일교육 과정에는 대상별로 통일교육 관련 기관·단체 회원을 비롯하여 여성계 인사, 종교계 인사, 민간차원의 대북인도지원 업무 종사자 등이 교육에 참여하였다.

사회통일교육 과정 참가자들에게는 직능별 특색을 고려하여 「통일한국과 종교인의 역할」, 「북한이탈주민 적응실태와 해결과제」, 「NGO 대북지원 사례」, 「NGO 활동의 전문성 향상」, 「남북나눔의 삶과 실천방법」, 「통일교육발전토론회」, 「남북경협 사례와 발전방향」 등 총 24개의 맞춤형 교과목이 제공되었다.

사회통일교육 과정 교과목

NGO 활동의 전문성 향상	북한이탈주민의 건강관리
NGO 대북지원 사례	북한이탈주민 적응실태와 해결과제
구서독 정부의 동독 이탈주민 정책	북한이탈주민 지원사례
남북경협 사례와 발전방향	북한이탈주민 지원프로그램과 봉사
남북 나눔의 삶과 실천방법	북한인권 문제와 해결과제
대북사업자가 본 북한	북핵문제와 한반도 평화정착
대일 무역역조 심각성과 정부의 노력	영화를 통한 북한사회 이해
동서독 교류협력 사례와 시사점	통일교육발전토론회
북한 경제구조와 개혁개방 전망	통일한국과 종교인의 역할
북한 식량난과 대북지원	한민족 갈등관리와 국민통합
북한여성 생활방식과 여성교류	한민족 역사와 통일국가 발전전략

나. 학교통일교육 과정

학교통일교육 과정은 대학교수, 초·중·고등학교 교장·교감, 장학사, 교육연구사, 유치원 및 각급학교 교사, 미래의 교사인 일부 대학생 등 교육현장에서 활동하는 교육자들을 대상으로 총 25개반 1,452명에게 3~10일간 교육이 실시되었다. 학교통일교육 참가자들은 청소년들

에 대한 영향력이 크다는 점을 감안하여 현재 남북관계 현황과 정부의 대북정책, 분야별 북한 실상과 북한 핵문제, 안보환경 등에 대해 객관적인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는 동시에 교육현장에서 직접 활용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교육을 실시하였다.

교과에는 교사들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수업사례와 현장체험을 위주로 하되 교사들의 통일준비역량 강화를 위해 북한의 교육제도, 남북교육통합, 북한이탈주민 문제 등의 교과목이 포함되었다. 특히 통일환경·북한실상 등에 대한 객관적이고 사실적인 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한반도 주변정세, 북핵문제, 북한인권 등 통일환경과 북한이해 관련 전문커리큘럼을 보강하였다.

교육계의 여론 주도층인 교장·교감, 교육전문직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 통일교육의 파급효과를 제고하는 한편, 교육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관리자 맞춤형 커리큘럼을 편성하고 “스승의 날 특별행사” 등을 실시하였다. 아울러 통일 및 북한학계의 여론 주도층인 대학교수를 대상으로 우리의 대북정책, 북핵문제, 북한인권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상생·공영의 대북정책 발전방향」을 주제로 대학교수통일문제워크숍을 개최하였다.

통일교육 전문교사의 역량 강화를 위해 핵심전달자인 도덕·사회과 교사를 대상으로 학기 중에는 단기과정(15시간 1학점)을, 하계 방학기간 중에는 장기과정(60시간 4학점)을 운영하였다. 특히 장기반의 경우에는 대북정책, 통일환경 등 기본과목 이외에 학교통일교육분야 2과목, 북한이해분야 5과목, 통일준비분야 2과목, 세미나 6회, 사례청취 4회, 특강 4회 등 다양한 전문 프로그램을 편성·운영하였다.

학교통일교육 과정에서 교육대상별로 실시된 특색 있는 강좌들은 아래 표와 같다.

학교통일교육 과정 교과목

· 각급학교 통일교육 사례	· 유아를 위한 통일교육의 기법과 사례
· 경제난 이후 북한교사의 현실	· 플래시 애니메이션을 활용한 각급학교 통일교육 기법
· 남북교육교류 및 통합의 과제	· 학교통일교육의 현주소와 실천방안 (세미나)
· 도덕·사회교과에서의 통일교육	· 북한의 각급학교 교육제도 및 현황
· 북한의 각급학교 교육제도 및 현황	· 북한이탈 학생 적응실태와 과제

다. 공무원통일교육 과정

공무원통일교육 과정은 총 30개 학급 1,761명을 대상으로 3~10일간의 맞춤형 교육이 실시되었다.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4~7급 직원,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업무 담당자, 보안경찰, 비상계획업무 담당자, 신규임용 수습사무관 등이 공무원통일교육 과정에 참가하였다.

일선 경찰서에서 보안업무를 담당하는 보안경찰,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비상계획 업무 담당자 및 장병정신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정훈장교 등을 대상으로 한 통일교육 등도 실시되었다.

임용예정 신규 공무원에 대한 교육도 실시하였는데 국회사무처에서 수습중인 입법고시 합격생들, 중앙공무원교육원과 외교안보연구원에서 수습중인 행정고시와 외무고시 합격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고, 사법연수원의 통일법학회원들에게는 통일부 소관 법과 제도에 대한 브리핑을 실시하였다.

아울러 중앙부처와 지방행정기관 및 공기업 소속 직원으로서 남북교

류업무를 직접 담당하고 있거나 관련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인원들을 대상으로 남북협상전문가반을 신설하였다. 남북대화의 특징과 본질, 남북간 협상 주요 의제·쟁점, 회담운영 프로세스, 대표단 행동요령 등 회담 관련 실무적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였으며, 다자회담 시뮬레이션 및 남북간 모의회담을 실시하였다.

공무원통일교육 분야에서 교육대상별로 실시된 특색 있는 강좌들은 아래 표와 같다.

공무원통일교육 과정 교과목

북한공무원의 선정방식과 행정원리	신세대 장병 통일교육 사례발표
북한의 경찰제도와 실태	자치단체 교류협력 사례와 과제
북한의 행정체제	통일부 소관 법제업무 안내

라. 통일미래지도자과정

통일미래지도자과정은 한반도 통일과정에서 중심적 역할을 담당할 범국가 차원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2006년부터 운영되어 오고 있으며, 정부와 민간의 중견 정책결정자를 대상으로 남북교류협력과 통일을 이루는 과정에서 필요한 창의적 리더십, 상황변화 대처능력, 통합·조정 능력과 정책 실무능력을 배양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08년도에는 제3기 교육생을 양성하였는데, 교육은 2008년 2월부터 12월 까지 10개월간 실시되었다.



제3기 통일미래지도자과정 정보화 교육



제3기 통일미래지도자과정 토론회

제3기 교육생은 헌법재판소, 감사원, 국회사무처, 법원행정처 등 4개 헌법기관과 외교통상부, 법무부, 국방부,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노동부 등 15개 중앙행정기관 및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등 4개 지방자치단체의 국·과장급, 그리고 대한주택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수출입은행 등 9개 공기업 간부 등 총 35명으로 구성되었다.

교육내용은 통일정책·북한이해·국제관계·통일과정 등 분야별 전문 강의, 정책세미나, 현안문제토론회 등 참여학습, 남북교류협력현장, 안보현장 등 현장체험 학습, 구사회주의 국가 체제전환 해외사례연구, 개인별 정책과제연구, 교양 강의, 외국어 및 정보화 교육 등 다양하게 편성·운영되었다.

통일미래지도자과정 교육프로그램

구 분	세부 내용
기본교과	통일정책, 북한이해, 국제관계, 통일과정
참여학습	정책세미나, 현안문제토론회, 독서토론, 협상시뮬레이션, 상호이해와 의사소통 훈련
현장체험	남북교류협력현장, 안보현장, 해외사례연구
정책과제연구	연구계획 수립, 개인연구, 정책과제연구 지도, 발표·평가
교양 및 자기계발	소양교과, 외국어교육, 정보화교육, 체육활동, 사회봉사활동